




|  |                  |  |  |   |
|--|------------------|--|--|---|
|  <b>해양수산부</b> |                  | <b>보 도 자 료</b>   |  |   |
|  |                  | <b>배포 일시</b>   | <b>2021. 9. 29.(수)</b><br><b>총 6매(본문 3, 참고 3)</b>                  |   |
| <b>담당 부서</b>   | 해양수산부<br>해양공간정책과 | <b>담당 자</b>  | • 과장 황준성, 서기관 구본찬, 주무관 박봉석<br>• ☎ 044)200-5260, 5263, 5264         |   |
|  | 인천광역시<br>해양친수과   |  | • 과장 이한남, 사무관 백승훈, 주무관 김희용<br>• ☎ 032)440-5672, 458-7151, 458-7154 |   |
|  | 경기도<br>해양수산과     |  | • 과장 김성곤, 사무관 김종배, 주무관 양일권<br>• ☎ 031)8008-2670, 4560, 2672        |   |
| <b>보 도 일 시</b>   |                  | 2021년 9월 30일(목)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 30.(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  |   |

## 인천 · 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 - 해양공간 특성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목)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개발 등 9개(「해양공간계획법」제12조)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km<sup>2</sup>)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에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88%)으로 지정하였고, 이어 군사활동구역(33.03%),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9.83%),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6.32%),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 관리구역(6.32%), 항만·항행구역(4.33%) 순으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0.37%),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0.32%),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0.08%)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되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9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하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http://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http://www.mof.go.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경기도([www.gg.go.kr](http://www.gg.go.kr))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2020. 2.),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의 긴밀히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 (법적근거)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수립권자) 해양수산부장관(대륙붕, EEZ, 국가관리 항만구역),  
시·도지사(국가관리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
- (주요내용)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 등 특성평가,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 □ 인천·경기 수립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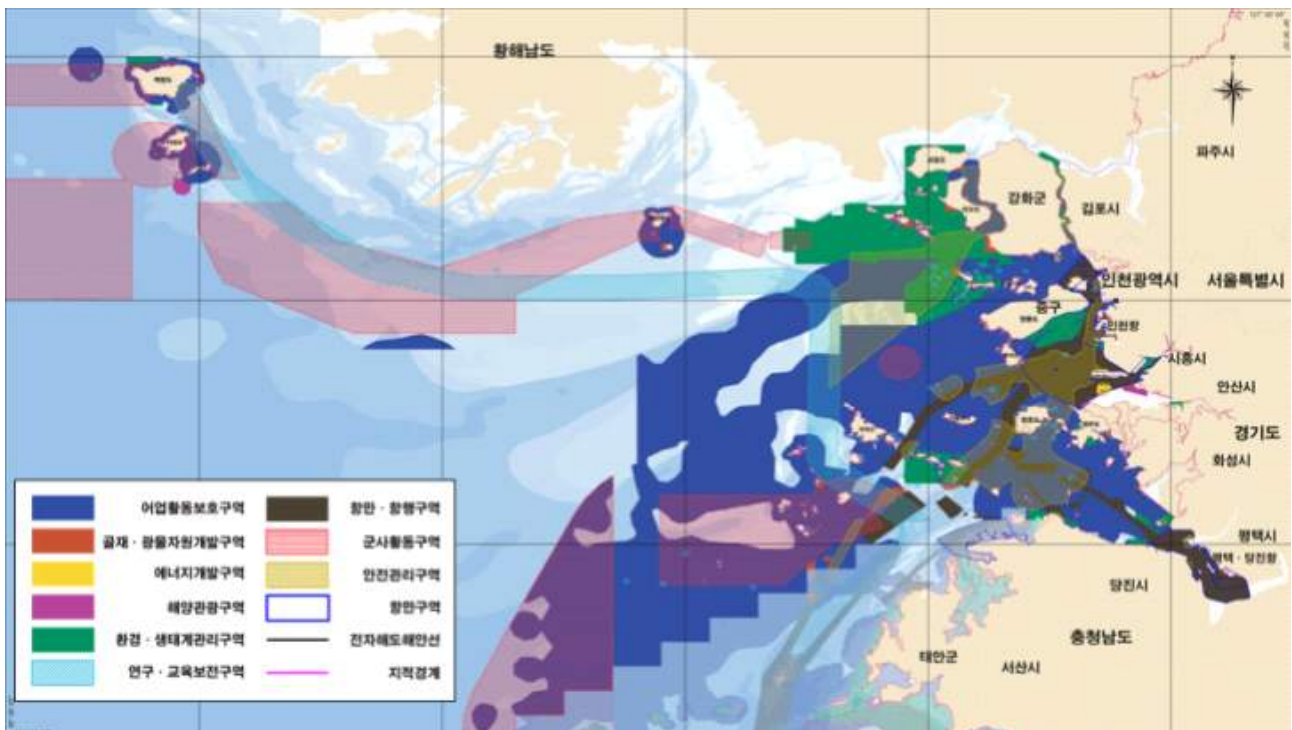
-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국정과제 선정('17.6)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4) 및 시행('19.4)
- 인천 및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 착수('19.3)
- 지자체, 이해관계자 설명 및 의견수렴('19.5)을 거쳐 관리계획 초안 마련('19.8)
- 인천, 경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19.12, '20.1 2회)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6조,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천,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 개최('20.7)
  -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방역조치 감안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관계 행정기관(중앙, 지방) 의견조회('20.9~10)
  -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심의(경기 '20.12, 인천 '21.1)
  -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 지역위원회 심의의견 검토 및 반영('21.2~4)
- 관계 행정기관(중앙, 지방) 추가 협의('21.4~8)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21.9)
  -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 참고 2

## 인천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구 분       | 면적(km <sup>2</sup> ) | %            |
|-----------|----------------------|--------------|
| 전 체       | 11,609.73            | 100.00       |
| 어업활동보호    | 4,630.21             | <b>39.88</b> |
| 군사활동*     | 3,834.22             | <b>33.03</b> |
| 연구·교육보전*  | 1,141.34             | <b>9.83</b>  |
| 안전관리*     | 997.7                | 8.59         |
| 환경·생태계관리  | 733.93               | 6.32         |
| 항만·항행     | 502.98               | 4.33         |
| 해양관광      | 42.54                | 0.37         |
| 골재·광물자원개발 | 36.60                | 0.32         |
| 에너지개발     | 9.53                 | 0.08         |
| (중복*)     | (2,984.74)           | (25.71)      |
| 소계        | 8,944.31             | 77.04        |
| 유보해역      | 2,665.43             | 22.96        |

\*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가능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 참고 3

### 경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구 분       | 면적(km <sup>2</sup> ) | %            |
|-----------|----------------------|--------------|
| 전 체       | 936.29               | 100.00       |
| 어업활동보호    | 510.11               | <b>54.48</b> |
| 항만·항행     | 274.88               | <b>29.36</b> |
| 안전관리*     | 252.75               | <b>27.00</b> |
| 환경·생태계관리  | 48.76                | 5.21         |
| 해양관광      | 10.04                | 1.07         |
| 에너지개발     | 8.46                 | 0.90         |
| 연구·교육보전*  | 4.24                 | 0.45         |
| 골재·광물자원개발 | 1.48                 | 0.16         |
| 군사활동*     | 0.00                 | 0.00         |
| (중복*)     | (253.99)             | (27.13)      |
| 소계        | 856.74               | 91.50        |
| 유보해역      | 79.55                | 8.50         |

\*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가능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